

김홍업 당선 힘받은 민주당

호남맹주 재확인... '범여' 통합 주도권

민주당은 '호남 텃밭'의 중심부인 무안·신안 보궐선거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후보가 당선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선거 초반 '세습정치' 논란 등 차가운 민심의 벽에 부딪혀 고전했던 지역을 말끔히 털어내고 호남 맹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호남 민심과 DJ를 등에 업어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범여권 통합을 촉구해 온 DJ의 '메시지 정치'도 김 후보의 당선으로 현실 정치에 보다 깊숙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범여권 대통령 등 정계개편에 대한 김 후보의 태도는 곧 'DJ'의 의중으로 해석되면서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홍업 후보는 문화상, 이해찬, 배기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중진 그룹과 상당한 친분을 맺고 있다"며 "김 후보의 당선은 '범여권 대통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무안·신안 보선에서 김 후보가 당선된 것은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해 대선에 임하라는 국민의



민주당 이상열(앞줄 왼쪽부터), 김홍업 의원, 박상천 대표, 이철 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무안·신안 김홍업 후보의 당선에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정국 영향력 강화 적극행보 시도 DJ 영향력 입증... '메시지 정치'도 탄력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선거를 기록으로 삼아 중도개혁세력 통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해선 이번 중도개혁세력 중 전국 조직을 가진 정당은 민주당 밖에 없다"며 "따라서 민주당이 (중도개혁세력 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표의 호언은 김씨의 당선을 계기로 민주당과 DJ의 호남

영향력이 견제함을 재확인,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재·보선 결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과 당 당으로 합칠 경우 12월 대선에서 어려워진다"며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하지만 여권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독자창당을 추진 중인 통합신당추진모임에 대해선 '통합신당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채 등거리 전략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미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대철 상임고문을 만났고, 재선그룹의 의견도 간접적으로 청취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재·보선 결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과 당 당으로 합칠 경우 12월 대선에서 어려워진다"며 "중도개혁세력을 통합하지만 여권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독자창당을 추진 중인 통합신당추진모임에 대해선 '통합신당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채 등거리 전략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1' 가는길 첩첩산중

국회 문광위 공청회서 문제점 잇단 제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F-1(포틀러인) 대회를 지원할 F-1특별법에 대한 국회 문광위원회의 공청회가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되면서 F-1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5일 국회 문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F-1 특별법안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문광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상업성이 강한 F-1 대회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수익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김재운 의원은 "F-1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

업도시 특별법이 있는 데도 따로 F-1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같은 당 이광철 의원은 "경기장 부지가 연약지반인 간척지여서 오는 2009년까지 2년6개월 동안 경주장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F-1 대회의 핵심 기관인 MBH, KAVO, 한국자동차경주협회의 대표가 같은 인물"이라며 "특정 세력이 F-1 대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F-1 경주장이 들어서는 영암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선호 의원은 "상업성이 높다면 공익성을 강화하면 되며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고쳐야 된다"고 맞섰으나 전반적인 반대 분위기를 만

전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의견진술자로 나선 김종의 경실련 전남협의회 사무국장은 "대회 관련 시설의 범주에서 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지연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찬 변호사도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F-1유치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회사인 FOA와 KAVO간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자체가 해지 또는 파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특별법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광위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여야 문광위원들이 F-1 특별법 제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게 됐다"며 "전남도와 전남 지역 의원들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 할 수 있다'

김성호 법무 밝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불법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회가) 진상조사를 원한다면 대선자금 사용처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

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2.3 정도 됐다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r

그는 그러나 "검찰기록이나 남아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 당시 검찰이 밝힌 액수 이상으로 남겨놓은 부분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송 전 총장의 발언이 수사를 철저하게 했다는 점을 감동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효 부분 때문에 수사를 더 할 방법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r

매표방지용 '칸막이형 기표소' 되레 투표결과 노출?

4·25 재·보선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칸막이형 기표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5일 치러진 재·보선 국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기존 4면을 모두 가린 기표소 대신 뒷면이 터진 '칸막이형'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했다.

하지만 무안 등 일부 투표소에서 상당수 노인들이 기표를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와 투표함에 집어넣는 바람에 투표 결과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모(50·무안읍)씨는 "이 때문에 선거종사자들과 참관인들은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무의식적으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나오는 경우 기존 4면이 모두 막힌 기표소에서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라며 "투표내용을 고의적으로 알려려는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칸막이형 기표소는 지난해 5·31 지



4·25 재·보선에 처음 등장한 칸막이형 기표소. 입구를 천으로 가린 기존 기표소와 다른 모습이다.

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접수된 '기표소 내에서 투표결과를 휴대폰으로 촬영 후 후보자에게 보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보를 토대로 이번 선거부터 도입됐다. 매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5일 국회의원회과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무안과 신안 등 10개 시·군 유권자 300명씩 모두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응이 좋을 경우 올 연말 대선때 이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 후면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

檢, 의사협회 전격 압수수색

장 회장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착수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정치권 로비발원 과문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지검에 있는 사건은 의협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의 고발과 있어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 등 용체를 확인 중이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이와 관련이 있는 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

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특검 도입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전적으로 과장·허위 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장 회장의 로비 효과가 의료법 개정 과정에 일부 반영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장 회장은 로비를 통해 법안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당초 이 법안은 처방전 내용에 관한 약사의 문의를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를 거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장 회장을 출석시킨 상임위에서 "당신 (로비가) 통하지 않았잖아"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 심의 과정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돼 로비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motrack' (덤프트럭용 자동덮개) featuring images of trucks and text about sales points, qualifications, and features.

Advertisement for 'Hanbit' (한빛) exam preparation courses, listing subjects like public relations and real estate,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bit' (한빛)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including details about exam dates, subjects, and enrollment information.